

광주 학교통폐합 수년째 난항

삼정초-울곡초, 중앙초-서석초, 천곡중-침단중 '없던 일'
 상무중-치평중 통합, "안내문도 없이" 학부모-학생 반발
 교육청 "교육력 향상, SOC 확충, 지역발전 등 시너지 커"

광주시교육청이 초·중·고 학생 수 20만명 붕괴와 특수학교 설립 추진 등을 계기로 일부 학교 통폐합에 나섰다. 학부모와 학생 반발 등으로 백지화되는 등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 당국은 그러나 통합 추진 시 교육력 향상과 지역 발전 등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어서 학교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광주지역 취학학생수(특수학교 포함)가 20만명 이하로 내려가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학교 통폐합 카드를 꺼내들었다.

학생수 감소→학급수 감축→교원수 감소→정부 지원금 감소→교육의 질 하락이라는 전통적인 악순환 구조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긴급처방이었다.

공립 특수학교 설립 문제와 맞물려 '총량제'를 꺼내든 교육부의 당시 가이드라인도 통폐합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

고민 끝에 도출된 통폐합 대상은 크게 4곳으로, 도심 공동화로 초미 학교로 전락한 중앙초와 서석초, 학생수 불균형이 극에 달한 삼정초와 울곡초, '여고 불모지' 광산의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천곡중과 침단중 통합 등이 애초 실현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특수학교 설립과 연동된 학교 재구조화 차원에서 상무중과 치평중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4개 선도모델 모두 학부모와 학생, 동문회 등 구성원들의 반발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대부분 '없던 일'이 됐다.

인구 유인책 마련과 함께 학교 조정이나 통폐합 등을 통한 학교 구조조정이 검토돼야 할 때라는데 공감하면서도 통폐합이 가져올 후유증과 동문회 반발 등으로 4곳 중 상무중과 치평중 통합을 뺀 3곳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상무중과 치평중 역시 하나로 합친 뒤 40여원을 들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진로체험센터'와 함께 문화센터·공공도서관·공공주차장을 두루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신축기로 하고 서구청과 협력 체계까지 갖췄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1km 안에 금호중 효광중도 자리하고 있어 통폐합 후 학생 배치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감대 형성에 애를 먹고 있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어떠한 사전 설명회와 안내문도 없이 수업 중 학생들에게 프리젠테이션까지 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2년 전에도 통폐합을 추진하려다 무산되

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었다"는 입장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필실 통폐합은 안된다"며 대책위원회까지 꾸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통폐합이 대부분 무산된데 이어 마지막 카드마저 반발에 부딪히자 당혹해 하면서도 당위성과 명분이 있는 만큼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4곳에서 3곳은 백지상태고, 상무중과 치평중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학교 선정과 추진방법, 일정 등을 협의하고 학부모 설명회와 공청회 등의 절차도 밟아나갈 예정"이라며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교육력 향상, 정부의 생활SOC 확충 지원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 관점에서 가장 적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상무중과 치평중 외에도 필요할 경우 통폐합을 다시 추진키로 하고, 교육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통폐합 대상 학교를 다시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인호 기자



대피훈련하는 어린이들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림초등학교에서 열린 제41차 민방위의날 대테러 대피 훈련에서 학생들이 건물밖으로 대피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 "공립유치원 1시간 연장은 행정편의"

광주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할 것을 두고 교육시민단체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1학기부터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시간을 하루 4.5~5시간으로 변경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은 유아들의 발달 수준과 학습량 가중을 고려치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여성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3대 노조와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과 통학버스 지원, 공립유치

원 40% 확충, 방학 중 직영급식 시행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 운영시간은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됐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와 관련 "하루 4~5시간으로 명시된 법적 효력이 있는 교육부 고시를 무시한 것이고, 유치원 교원과 시간제 유치원 교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의 노동력 착취이자 편익주의적 행정이고, 공립유치원 연장 운영이라는 사회적 명분만 남길 뿐"이라며 교육과정 편성시간 축소 등을 요구했다.

이어 "무릎학교 같은 말이 있듯 영유아기는 부모의 품과도 같이 안정되고 편안한 환경, 발달수준에 맞는 몰입교육이 중요하다"며 "2015년

2월 이전의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까지 하루 3시간을 교육과정으로 고수한 것도 이러한 의미가 담긴 것"이라며 "교육과정을 4.5~5시간으로 늘리라고 강요하는 것은 4년 전 교육부가 추진하다 실패한 고시안대로 가르치라는 비교육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유아교육의 내실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발달에 가장 적절한 교육과정 편성시간을 4시간 이내로 축소할 것과 각 유치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운영 보장"을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서은홍 기자

뉴질랜드 교사5만여명, 일제 파업 돌입

5만명이 넘는 뉴질랜드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29일 24시간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다고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이는 뉴질랜드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이다.

2017년 말 노동당 연립정권 출범 이후 교사들은 임금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 교사에 대한 존경 등을 요구하며 3차례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이 일제히 단합해 파업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 때문에 뉴질랜드 언론들은 이번 파업을 '베가 파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교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3%의 임금 인상 제안을 거부하면서 최소 15%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임금 인상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며 15%의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클랜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20년 넘게 일해온 칼리 올리베이라(여)는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모든 교사들이 너무 지쳐 있다. 교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교사직을 그만 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가법계 파업을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에 지쳐 더이상 교육에 매달릴 수 없다. 뉴질랜드는 심각한 교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뉴질랜드 교사와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시리아 정부군, 반군 점령지 공격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의 마지막 거점인 시리아 북서부 지역을 공격하면서 한달 만에 민간인 22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자리라는 28일(현지시간) 시리아 의료구조 단체 연합(UMCRO)을 인용해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과 러시아가 한달 동안 시리아 북서부 지역을 폭격했고, 이로 인해 민간인 229명이 사망하고 727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이 운영하는 민간단체 '시리아 인권 관측소(SOHR)'에 따르면 28일 당일에만 이틀립주와 알레포주 여러 마을을 정부군이 공격해 민간인 21명이 숨졌다. 이중 9명은 어린이라고 SOHR은 주장했다.

반군 측 구조단체 '시리아 시민방위대(하얀 헬멧)'은 이날 사망자를 24명으로 집계했다. 하얀헬멧은 알레포주 서부 카프르 할랍 마을 변화기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민간인 9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 거리는 당시 라마단 기간 이른 아침을 먹으려는 인파로 북적거렸다.

시리아와 러시아군의 공격이 이뤄진 이틀립주와 알레포·하마·리타키아주 일부 지역은 이슬람 반군 '하이트 타흐리르 알샤' (HTS)이 지배하고 있다. HTS는 이슬람 과격단체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에 뿌리를 둔 조직으로 시리아 정부는 심벌을 공인한 바 있다.

시리아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2011년 시위대의 민주화 요구를 무력 진압하면서 내전이 촉발됐다. 러시아와 이란이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미국과 터키가 반군을 지원하는 등 외세가 개입하면서 내전은 장기화되고 있다. 러시아와 터키는 지난해 9월 이 지역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양측의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

미주리주, 낙태클리닉 면허갱신 거부

미국 미주리 주정부가 주내 낙태(임신중단)클리닉의 면허 갱신을 거부하면서 클리닉 측과의 법정다툼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미국에서 일고 있는 반(反)임신중단 논란에 더욱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28일(현지시간) CBS와 CNN에 따르면 미주리주 가족계획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주리주 보건부가 임신중단 시술 관련 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주리주는 조지아, 앨라배마 등과 함께 올해 들어 임신중단을 제한하는 주법을 통과시킨 곳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주리에는 현재 세인트루이스 소재 '가족계획클리닉'이 임신중단 시술을 제공하는 유일한 병원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클리닉이 보유한 임신중단 시술 면허는 오는 31일 만료된다. 면허가 갱신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임신중단 시술을 행할 수 없다.

미주리 보건부는 면허갱신과 관련해 지난 20일 부실관행 등 조사를 명목으로 클리닉 소속 7명의 의료진을 면담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클리닉 측은 7명의 의료진 중 레지던트 신분인 5명을 제외한 2명만 면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속 의료진에 대한 주정부 면담이 사실상 형사소송 절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센터 측 우려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담에는 검진기관이 응급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h-well 국민건강검진